



## WHO, DDT 적극 사용 권장

**세** 계보건기구(WHO)가 지난 9월 15일 말라리아의 예방에는 살충제 DDT의 옥내살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DDT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DDT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모기 유충 등 해충 퇴치 수단으로서 1940년대부터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었지만 환경문제의 관심이 높아진 60년대 이후는 유해화학물질의 대표로서 각국에서 사용금지 되었다.

WHO에 의하면 옥내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환경에 영향은 거의 없고 인간에게도 발암성이 없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지게 되었다고 한다.

옥내에 살포하면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가 벽이나 천정에 붙지 않게 되어 가정 모기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WHO에서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적인 환경보호단체인 「농약행동 네트워크」 등은 「DDT는 신경계에의 악영향도 지적되고 있어 말라리아로 괴로워하는 아이나 가족에게 있어서 새로운 위협이 된다. 모기장 배포 등 보다 안전한 대책이 존재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100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 바이엘, 이익품목 집중 경영체질 강화

**바** 이엘 크롭사이언스(BCS, 독일 몬사임)는 이번에 United Phosphorous Limited(UPL, 인도 불바이)에 제초제 및 살충제 2품목을 매각했다. 이는 이익품목에 집중함으로써 경영체질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번 매각대상 농약은 침투성 카바메이트계 제초제의 유효성분인 아슈람(Asulox) 및 trichlorfon(디프테렉스) 살충제 등 2품목이다. BCS는 전략적 시장에 있어서 비농업용 용도에 대해서는 당분간 판매권리를

보유한다. 매각액은 약 4,350만유로(약 600억원)이다.

BCS에 있어 이번 제품매각은 이익성이 높은 제품에 집중하여 포트폴리오(제품 구성)의 최적화를 진행시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한편 UPL에 있어서는 고객에게 폭넓은 문제 해결을 제공하기 위한 세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의 강화 전략으로 연결된다.

UPL은 인도 최대의 농약회사이며 업계에 있어 막테심야간(이스라엘), 뉴팜(오스트레일리아), 케미노바(덴마크)에 이어 세

계 톱4의 제네릭 회사로 꼽힌다. 2006년 3월말의 매상고는 4억8,000만US\$이다. 요즈음 제네릭(특허가 만료된 것) 농약회사의 성장 약진이 눈에 띄고 있다. 막테심아간은 브라질의 두 개사를 매수하고 성장노선으로 들어가 지금 업계의 톱을 달리고 있다. 전 세계 농약산업 중에서도 제7위에 랭크되고 있다.

이번 매각은 BCS에 있어서는 이익품목에

집중한다고 하는 전략노선 가운데 하나이며 UPL에 있어서는 성장전략에 한층 더 기세가 더하여 진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300억 달러가 넘는 농약시장 가운데 장기적으로 제네릭이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현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각사의 R&D(연구개발)비용의 투자가 우려되지만 유효성분의 동등성 등 안전대책이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 잔류농약? 바나나 끝 자르고 먹을 것인가?

**전** 강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역시 종전까지 종종 잡지 등에 소개된 적이 있는 「바나나는 끝에서 1cm정도 잘라 버리는 것이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다」라는 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나나에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끝에 잔류하기 쉽고 끝의 단면으로부터 스며들기 때문에」라는 것이 그 설의 근거로 되어 있다.

바나나는 소화가 잘되고 급히 혈당치를 올리는데 적합한 음식으로 임신부 대상의 요리책에서는 「아침식사를 먹을 수 없을 때에는 적어도 바나나 1개만이라도 먹어야 한다」라고 그 효용성을 호소해 바나나의 상비를 권하고 있는 것을 본적도 있다. 물론 「끝에 잔류 농약설」은 단지 임신부가 아니라도 신경이 쓰이는 일이다.

도쿄의 식품과학홍보센터에 의하면 이설에 대해서는 이미 도쿄도립위생연구소가

「바나나의 잔류농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동연구소가 바나나 꾸러미의 외측 3분, 내측 2분을 취하여 「끝에서 가까운 쪽」 「한가운데」 「앞쪽」을 각각 3cm씩 잘라내 조사한 결과 비터타놀이이라는 살균제가 한 꾸러미의 바나나에서도 각본마다, 같은 1분에서도 부위에 따라서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검출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바나나에 사용된 농약이 어느 부위에 많이 잔류한다고 말할 수 없고 「끝에서 1cm 잘라내는 것이 안전」이라고 하는 설에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식품과학홍보센터에서는 「바나나의 잔류농약은 실제로 먹지 않은 껍질도 포함되어 있지만 농약이 검출되는 비율은 낮고 검출되었다고 해도 극히 미량이다. 하물며 과육



부분에는 농약은 거의 잔류하고 있지 않다」로서 바나나의 안전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소비자

로서는 「끝에 잔류 농약설」이 어쨌든 수입 과일에 잔류농약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재인식시키는 주장에는 차이가 없다.

## 마이너작물 농약등록 촉진, 적극적인 데이터 작성에서

**일** 본식물방역협회는 지난 9월 8일 동경 교육회관에서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이너작물 대책을 생각한다」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마이너작물 등의 농약등록 촉진은 관계자의 적극적인 데이터 작성 추진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었다.

지역농업의 진흥이나 음식의 다양화로 마이너작물의 병해충 방제대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7월말에 경과조치 기간이 종료되어 마이너작물의 방제대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금까지 성과를 총괄해 향후 전개 방향을 모색하였다.

마이너작물이란 전국의 생산량이 3만톤 이하의 농작물을 말하며 지역 특산농산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농약관리법 개정에 의해 농약의 사용지는 적용대상작물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가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으로 적은 면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마이너작물이나 주요한 작물에서도 적은 규모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

해서는 적용작물에 등록이 되어있는 농약이 적고 이러한 병해충 방제에 농약을 사용하면 등록이 되지 않는 농약을 사용하므로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벌칙의 대상이 된다.

이대로는 생산량 증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그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 「등록 적용작물의 그룹화」와 「경과조치」였다. 그룹화는 작물의 형상, 이용부위에서 유사성이 높은 작물을 그룹화 함으로써 농약의 등록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11개의 그룹이 설정되어 있다.

또 경과조치는 그룹화에 해당되지 않고 게다가 생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물에 대해서 특례조치로서 농약이 적용확대 될 때까지 일정기간(대개 2년간)동안 현행이 안전한 사용방법을 설정하여 지도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농약사용을 인정한 것이다.

마이너작물에는 지역특산품의 브랜드화 추진이라고 하는 면도 있어 재배면적이 작아도 그 지역에 있어서는 중요한 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림수산성에서는 마이너작물에의 농약등록을 한층 더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中 · 日 간 「식품위생전쟁」 발발

**중** 국과 일본이 쌍방에서 수입한 상대방의 식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식품위생전쟁」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최근, 일본산 화장품에서 금지되고 있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일본산 화장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지시했다고 중국의 매스컴에서 17일 발표 하였다. 화장품만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심천 검사검역국은 금년 6월 일본에서 수입된 물고기의 내장에서 중국의 국가기준치의 17.3배를 넘는 초산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광둥, 산둥, 료녕 등 각 지방의 검사검역국이 차잎, 케이크, 커피 등의 일본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나 이산화유황 등이 검출되었다고 연달아 발표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일본식품에 대한 공격은 일본이 금년 5월에 수입식품의 검역을 큰 폭으로 강화한 제도를 도입한 것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일본은 그 후 중국산의 완두콩, 땅콩, 냉동버섯 등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중국산 뱀장어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 잔류농약 규제로 日 · 中 협의

**일** 본이 5월말에 시행한 식품의 잔류농약의 신규제로 수출둔화를 염려하는 중국 정부가 28일부터 검역 당국자를 일본에 파견하여 후생노동성과 운용상의 규제 완화를 협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측도 중국정부가 보증하는 「우량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운용을 유연화할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의 현행 제도에서는 어느업자의 식품이 농약검사로 위반했을 경우 그 식품의 수출을 다루는 전업자에게 자기 부담으로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검사명령」이 나온다. 검역당국자에 의하면 후생노동성은 운용상

「검사명령」을 면제하는 일이 있어 중국측은 협의에서 위반한 경력이 없고 정부 보증이 있는 「우량사업자」인 경우에 「검사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할 전망이다. 「우량사업자」는 냉동시금치, 뱀장어 등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지만 중국측은 앞으로 지정의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측은 「검사명령」을 면제해도 임의 검사는 실시할 방침이다.

일본은 중국에 있어서 농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그러나 잔류농약의 신규제 실시 후 6월의 대일수출은 전년 동월비 18.0%의 대폭적으로 감소되었다. Y